

전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더 넓고 촘촘하게 된다

복지 사각 해소 핵심 시책 108억 투입 6만가구 지원 기준 완화·시군 특화사업

전남도가 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시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운영한다.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비 108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8,000가구(15%) 늘린 6만 가구로 확대해 생활 속 불편과 위기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크게 확대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식도 한층 유연해진다. 위기가구에 생계·의료비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존 소득·금융·재산 3가지 요건 확인에서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만 확인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생활불편개선 지원은 전기·가스·수전 교체 등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를 받은 가구더라도 150만원의 최대지원금 내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읍면동 복지기동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 편성비율을 사업비의 20%까지 확대하고,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사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도민을 찾아가 일상을 지키는 전남형 생활 복지 안전망"이라며 "지원규모와 내용 모두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변화를 체험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난해까지 모두 31만4,000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서비스 이용자 1,016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8%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신속성(97%), 향후 이용 의향(98%)도 매우 높아 복지기동대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확인했다.

정근산 기자

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등 1심 무죄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목으로 A씨의 법인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1회 발송 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가며 대량 발송할 목적이었다면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됐을 것"이라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보면 굳이 여러 사람을 고용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안 의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정산이 끝나지 않았을 뿐, 각 주체 간 환수 및 환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부담 자체만으로는 불법 기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달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판결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한 화순군 모처의 전화홍보방을 통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무분별하게 대량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정철 도의원 "기숙형중학교 안정운영 뒷받침"

지원 강화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운영중인 기숙형중학교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했고, 지원계획 수립, 지원 사업 추진,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체험학습활동·방과후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도 뒷받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기숙형중학교가 지역 여건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정근산 기자

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기숙형중학교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해 지역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기숙형중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숙형중학교는 지역 교육과정 정상화, 교육격차 완화,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세워졌고, 현재 도내에는 장성 백암중·보성 복내중·여수 화양중·신안 비금중 등 총 4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조례안은 기숙형중학교의 안정적인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획위 출범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이버클라우드 등 산학연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기획 운영 착수보고회 및 기획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이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할 것 같나"

주택시장 안정화 강한 의지 "5천피 시대보다 쉽고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과 휴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 계정에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라며 다주택자 규제의 부작용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수십, 수백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나라가 사라질 지경"인데 "그렇게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그렇게

부당하거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비정상적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기사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방곡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김현수 기자

산지 직송
믿음 직송

해남미소

해남군 로컬 농수특산물 통합 브랜드 해남미소

www.hnmiso.com

농어축수도 해남
080-859-1100 / 061-537-1472